


경제관계차관회의
(25-51차-㉓번 안건,
공개)

 역동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지원실적 및 향후 조치계획

2025. 1. 23.

관 계 부 처 합 동

순 서

I. 추진경과	1
II.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지원실적 ...	2
1. 소비자 지원	2
2. 판매자 지원	3
3. 제도개선	4
III. 향후 조치계획	5


I. 추진경과

□ **[현황] 미정산 피해 1.3조원, 위메프·티몬 회생절차 진행중**

- '24.7월부터 시작된 위메프·티몬 미정산 사태에 따른 피해규모는 판매자 1.3조원(4.8만개사), 소비자 234억원*(2.1만명)으로 집계
 - * 여행·숙박·항공권은 분쟁조정결정 기준(135억원, 0.8만명)
상품권은 1.20일까지 중복가입 등을 검토하여 조정된 신청접수 기준(99억원, 1.3만명)
(단, 카드사·간편결제사 등 통해 우선 환불받은 경우(445억원)는 미포함)
- 위메프·티몬은 '24.9월부터 기업회생절차 진행중으로 '25.2월까지 법원선임 관리인이 회생계획안 마련 예정

□ **[대응경과] 관계부처 TF 운영 및 8차례 대응·보완방안 발표**

- * 기재부 1차관 주재 / 공정위·금융위·금감원·산업부·중기부·국조실 등 관계기관 1급
- **(소비자)** 카드사·간편결제사 통해 일반상품 등에 대해 우선 환불, 여행·숙박·항공권 및 상품권 등은 집단분쟁조정절차 지원
- **(판매자)** 피해기업 자금애로 해소 위해 중앙·지자체 합동으로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고, 판로·고용 등 경영애로 해소 지원
 - 자금지원 대상 확대*, 금리 인하** 등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보완 지속
- * 9.9일인터파크쇼핑·AK물 추가 → 10.4일알렛츠 추가 → 10.24일샵인샵 피해업체 추가
- ** (소진공) 3.51%→2.5% (중진공) 3.4%→2.5% (신보·기은) 4.4~5.5%→3.8~4.9% (서울) 3%→2%
- **(제도개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e커머스사(일정규모 이상), PG사에 대해 정산기한 준수, 판매대금 별도관리를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안* 발의('24.10월)
 - *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e커머스사),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PG사)

 위메프·티몬 미정산 피해를 끝까지 내실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24년 지원실적을 점검하고 '25년 조치계획 마련 추진

Ⅱ.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지원실적 ('24.12.31 기준)

1 소비자 지원

- ◇ 소비자가 결제하였으나 사용하지 못한 **일반상품·상품권**은 **先환불(445억원)**,
先환불이 어려운 분야(여행상품 등)는 **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 지원

① [환불] 일반상품·상품권 등에 대해 총 445억원 환불 완료

- 소비자가 결제했으나 사용하지 못한 일반상품, 상품권*에 대해 카드사, 간편결제사 등이 우선 환불 → 총 444.7억원 환불

* 사용자에게 PIN번호가 발송되지 않은 상품권

② [분쟁조정] 여행·숙박·항공권 조정 결정, 상품권 절차 개시 검토

- (여행·숙박·항공권) 티메프 100%, 판매사(106개사) 최대 90%, PG사(14개사) 최대 30% 비율로 소비자 환급(8천건, 135억원) 결정('24.12.19일, 조정위)
- 판매사·PG사('25.1.3일~)·소비자(1.17일~)에게 조정결과를 발송하였으며, 수령 후 15일 이내 위원회 결과에 대한 수용여부 결정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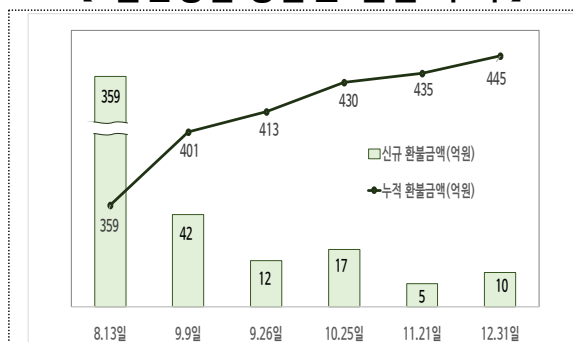
* (수용시) 위원회 결정대로 환급 진행 (미수용시) 소비자 개별소송 등 진행

- (상품권) 신청접수('24.8.19~27일)된 1.3만건(99억원*)에 대하여 서류 보완, 조정요건** 충족여부 선별 등 조정절차 개시 준비중

* 1.20일까지 중복가입, 기재오류 등을 검토하여 조정된 신청접수 규모

** 동일상품에 대하여 50명 이상 신청 접수된 경우

【 일반상품·상품권 환불 추이 】



【 여행·숙박·항공권 환급 예시 】

<소비자 결제 금액이 100만원인 경우>

구분	판매사	PG사	합계
분담비율	최대90%	최대30%	100%
예시 ①	90만원	10만원	100만원
예시 ②	80만원	20만원	100만원
예시 ③	70만원	30만원	100만원

2 판매자 지원

◇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게 **최저 2% 금리**로 유동성을 공급하고, **대체 판로 확보** 및 임금체불 발생시 **대지급금 지급** 등 지원

* 위메프, 티몬, 인터파크쇼핑, AK몰, 알렛츠, 셀러허브 입점업체 대상

1 (자금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 만기연장 등 총 4,885억원 지원

① 긴급경영안정자금 **중기부** : 중진공 **1,004억원(362건)** 소진공 **465억원(1,130건)**

* (중진공) 총 1,000억원 규모 / 2.5% / 10억원 한도 / 직접대출
(소진공) 총 1,700억원 규모 / 2.5% / 5억원 한도 / 직접대출

② 신보·기은 금융지원 **금융위** : **1,033억원(315건)** 지원, 평균 금리 **3.9%**

* 총 3,000억원 규모 / 30억원 한도(3억원까지 보증심사 간소화) / 3.3~4.4%

- 더 높은 금리를 적용받아야하는 저신용 기업에게 상한금리 (4.4%)를 적용하여 대출한 경우도 전체 대출의 16.5%(52건)

③ 관광분야 이차보전 **문체부** : **62억원(3건)**, 평균 금리 **2.8%p** 보전

* 총 600억원(대출규모) 규모 / 금리 2.5%p~3%p 지원

④ 지자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자체** : **12개** 지자체, 총 **340억원(174건)**

* 총 15개 지자체 / 직접대출(최저금리 2%) 또는 이차보전(최대 3%p) 등

⑤ 만기연장 **금융위·중기부** : 일반대출 **880억원(334건)**, 선정산대출 **1,101억원(1,381건)**

* 피해기업 기존 대출·보증, 위메프·티몬 등 매출 근거 선정산대출(SC·국민·신한) 대상

< 지역별 피해규모 및 자금지원(⑤ 만기연장 실적 제외) 현황 >

(억원, %)	서울	경기인천	대전충청	대구경북	부산경남	광주전라	기타	합계
피해규모	8,431	2,752	415	257	388	374	172	12,789
(비중)	65.9	21.5	3.2	2.0	3.0	2.9	1.3	100
지원실적	1,291	981.9	168.6	99.5	175.1	164.7	22.6	2,903
(비중)	44.5	33.8	5.8	3.4	6.0	5.7	0.8	100

☞ 피해기업이 신속하고 충분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자원을 활용하여 **최대치로 공급 목표액**을 설정

- 실제로는 피해규모가 큰 **수도권·중소기업** 중심으로 자금 수요

* 지역별(①+②+③+④) : (수도권) 78.3% (충청권) 5.8% (경상권) 9.5% (전라권) 5.7%
기업규모별(①+③+④) : (소상공인) 26.4% (중소기업) 72.0% (중견기업) 1.6%

② [애로해소] 대체판로 확보와 임금채불 대응 등 판로·고용 지원

- **(판로)**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을 통해 쿠팡계열사 입점 중소기업·소상공인 1,089개사에게 他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 **(고용)** 위메프·티몬 대규모 인력조정에 따른 고용상황반을 운영하고, 임금채불 피해자 1.2천명에게 대지급금* 80억원 지급
- *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 개시결정 있을 경우 최대 2,100만원까지 국가가 임금 대신 지급

3 제도개선

◇ 유사한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안 마련

- 공청회('24.9.23일), 업계·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e커머스사·PG사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정산을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안* 발의('24.10월)

*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① [e커머스사] 정산기한 준수 및 판매대금 50% 별도관리 의무화

- **(주요내용)** 일정 규모* 이상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에게 구매 확정일로부터 20일 내 정산 및 판매대금 50% 별도관리 의무화
- * 연 중개거래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연 중개거래금액 1천억원 이상
- 단, 업계 부담 등을 고려하여 경과규정* 마련
- * (정산주기) 법 시행시(40일) → 1년뒤(30일) → 2년뒤(20일)로 단계적 단축
(별도관리) 법 시행시(30%) → 1년뒤(50%)로 단계적 인상
- **(추진상황)**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10.28일 발의(강민국 의원 등)
→ 현재 정무위 법안소위에 계류

② [PG사] 판매대금 100% 별도관리 시정조치 근거 마련 등 관리·감독 강화

- **(주요내용)** PG업 범위를 명확화*하고 정산대금 100% 별도관리 의무화 경영지도기준 미준수시 단계적 조치근거 마련** 등 관리·감독 강화
- * 자기사업 영위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대가를 정산(내부정산)하는 경우 PG에서 제외
- ** 시정요구 → 미이행시 업무정지 → 누적시 등록취소 등 단계적 조치근거 마련
- **(추진상황)**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10.31일 발의(강민국 의원 등)
→ 현재 정무위 법안소위에 계류(11.25일 소위 논의)

Ⅲ. 향후 조치계획

◇ 온라인 플랫폼 추가 정산피해, 분쟁조정 진행상황, 국회 논의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 지원·보완방안 신속 마련

① [소비자] 환불 지속하고 집단분쟁조정 통한 피해구제 밀착지원

- 카드사·간편결제사 등을 통해 일반상품 등 환불 지속 금감위
- 집단분쟁조정을 통한 소비자 피해구제 지원
 - 여행·숙박·항공권 분야는 당사자별 조정결정 수용여부 파악
→ 불수용된 경우 집단소송 등 지원방안 마련('25.2월) 공정위
 - 상품권 분야는 '25.2월중 조정절차 신속 개시 추진 공정위

② [판매자] 유동성 지원을 지속하고 필요시 보완방안 신속 검토

-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으로 자금지원
 -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지원을 지속하고, 금리는 '25년부터 일반 프로그램 수준(3.65%)으로 조정 중기부
 - '24년 자금지원 혜택을 받은 소상공인의 재기를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소진공 재도전특별자금 우대* 중기부
 - * (금리) 4.58% → 3.58%(△1%p), (한도) 0.7억원 → 1억원
 - 신보·기은 프로그램, 대출 만기연장 등은 '24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금 지원 지속 금융위·중기부
 - 지자체도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일반·특화프로그램 등 지원 지자체
- 공정위 「온라인플랫폼 피해대응 TF」를 통해 추가 피해 발생 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자금지원 대상 확대 등 보완방안 마련 공정위·금융위 등

③ [제도개선] 법률 개정안 통과 노력하고 추가 제도개선안 마련

- 「대규모유통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소통·협력 추진 공정위·금융위
- 온라인 플랫폼 外 전통 소매업(직매입, 특약매입 등) 분야도 대금 적기 지급을 위해 정산기한* 적정성 검토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25.上) 공정위
- * (직매입) 상품수령일 + 60일 (특약매입·위수탁·매장임차) 월판매마감일 + 40일